

#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

2022. 8. 19.

관계부처 합동

## < 안건 요약 >

### 1 국제감축 의의 및 배경

- (개념)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으로, 국제감축사업\*은 이를 위한 해외사업을 통칭
  - \* (예) 폐기물 자원화, 태양광 보급, E-mobility 교체, 산림흡수원 증진(REDD+) 등
- (동향) 日·스위스 등은 국제감축사업 추진 선제적 준비 중\*이며, 우리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에 보충적 활용 예정
  - \* (예) 일본 : '13년 이래 총 17개국과 파트너십 체결, 194건 시범사업 수행 중
- (사업 절차) G2G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, 그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\*
  - \* 우리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확보
    - 지원 유형 : ❶공동 투자 후 지분만큼 실적 회수, ❷민간의 감축실적 구매
    - 지원 자원 : ODA 자원은 개발원조 원칙상 사용 불가, 일반재정 활용 필요

### 2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필요성

- (감축 목표 뒷받침) '30년 국제감축 목표(33.5백만톤CO<sub>2eq</sub>\*) 달성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사업 선점·추진 필요
  - \* '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'18년 대비 △40%(291백만톤CO<sub>2eq</sub>) 감축할 계획이며, 이 중 국제감축을 통해 33.5백만톤CO<sub>2eq</sub>(전체 감축 목표의 11.5%) 확보 목표
- (신산업 동력으로 활용) 발전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로,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 기회로 활용
- (양자협력 내실화 추진) 개도국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, 상호 간 안정적으로 감축실적 확보 가능

### 3 그간의 정책노력 및 평가

- (현황) 국제감축사업 세부 절차에 관한 규범 마련\*, 양자협정 체결\*\* 등 진행 중으로, 추진기반·여건 마련 초기 단계
  - \* 「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(가칭)」 마련 중
  - \*\* 18개국(베트남 포함)을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('22.5.), 협상 추진 중

## < 안건 요약 >

- (평가)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박차 요구
  - (국내 추진기반 구축) 규범 마련을 완료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, 중장기 정부 지원계획 수립 필요
  - (G2G 추진여건 조성) 양자협정 체결 촉진 및 우호적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하는 전략 요구
  - (사업 활성화 유도) 보다 광범위한 사업 추진 지원과 함께, 기업 애로 해소 및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범부처 노력 필요

### 4] 국제감축 활성화 세부 추진전략

#### [추진체계]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립

-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\*을 신설하고, 세부 정책과제 추진·점검(월 1회)
  - \* (설치) 국제감축심의회(국제감축사업 주요사항 심의·조정, 국무2차장 주재) 산하, (참석)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(기재부 등 9개), 전담기관, 국제기구 등
- 플랫폼 內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·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 기획·관리 역량 강화

#### [정책과제] 추진기반·여건 마련 및 사업 활성화 유도

##### ① 국내 추진기반 구축

- (규범·체계 정비 마무리)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규범 마련을 마무리(9월중)하고, 국제감축등록부\* 등 관련 시스템 구축
  - \* 국제감축사업 신청·승인,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
- (지원계획 수립) '30년까지의 국제감축 경로\* 및 중장기 사업소요를 토대로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 수립
  - \* 국제감축 경로(연차별 국제감축 목표)는 '24년까지 UNFCCC 보고 필요
- (지원모델 설계)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국제감축 사업 투자·구매 지원모델 설계

## < 안건 요약 >

### ② G2G 추진여건 조성

- (양자협정 체결 확대 등) 우선 협력대상국(18개국)\*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, 협상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 협정문안 마련(금년중)  
\* (既체결 : 1개국) 베트남 / (체결 추진 : 17개국) 인니, 인도, 칠레, 태국 등
- (협력사업과 연계) 국제감축사업과 양자 ODA 등 협력사업을 연계\*하여 협력국 협조를 유도하고 우호적 사업환경도 조성  
\* (예) 매립가스 포집·소각 사업(본사업)과 인근 지역 환경 개선사업(ODA)을 연계
- (신탁기금 활용) 국제기구 신탁기금\*을 활용하여 국제감축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유도하고 기구별 협력 성과에 따른 신규재원 출연 추진  
\*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, ADB e-Asia·지식협력기금 등
- (국제금융기구 활용) ADB의 국제감축사업 지원 펀드\*에 EDCF 출자 검토 및 국내 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
\*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축진펀드(CACF) 운영 계획
- (국제사회 논의 참여) WB 기후마켓클럽\* 등 해외 지식교류 협의체에 참여하여 협력국과 네트워킹 강화  
\* 일본·스위스 등 13개국, GGGI 등 5개 기관이 매월 국제감축 관련 실무 정보 공유

### ③ 사업 활성화 유도

- (사업 발굴·개발 지원) 민관 협력모델 설계 및 유망 분야\* 방법론 개발을 통해 사업 기획 지원, G2G 사업 발굴\*\* 병행  
\* 그린수소, 탄소 포집·활용·저장 기술 등  
\*\* 양자협정 체결국과 공동위 설립 등 협정 이행 과정에서 사업 발굴 협의
- (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 지원) 민간 투자자금 확보 애로를 해소\*하고, 현지 사업주체와 컨소시엄 구성 지원  
\* 국제감축사업 재정 지원, 공적금융 지원(예 : 수은 국제감축사업 전용상품 개발) 등
- (사업 절차 부담 완화) 사업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하고, 감축실적 확보·사용 관련 불확실성 완화\*  
\* MRV(감축량 측정·보고·검증) 과정에 국내 기관 참여, 배출권 연계 간소화 등
- (공공기관 참여 유도)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타\*, 출자·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 등 추진  
\* (현행) 연 3회 신청, 최장 4개월 소요 → (개선) 수시 신청, 최장 2개월 소요

# 목 차

I. 국제감축 의의 및 배경 .....	1
II.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필요성 .....	4
III. 그간의 정책노력 및 평가 .....	5
IV.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.....	6
V. 세부 추진전략 .....	7
1.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립 ...	7
2. 추진기반·여건 마련 및 사업 활성화 유도 .....	8
VI. 과제별 추진 일정 .....	15

## I. 국제감축 의의 및 배경

### ① **【의의】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NDC\* 달성에 활용**

\* NDC :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, '30년 배출량 △40%(‘18년 대비) 감축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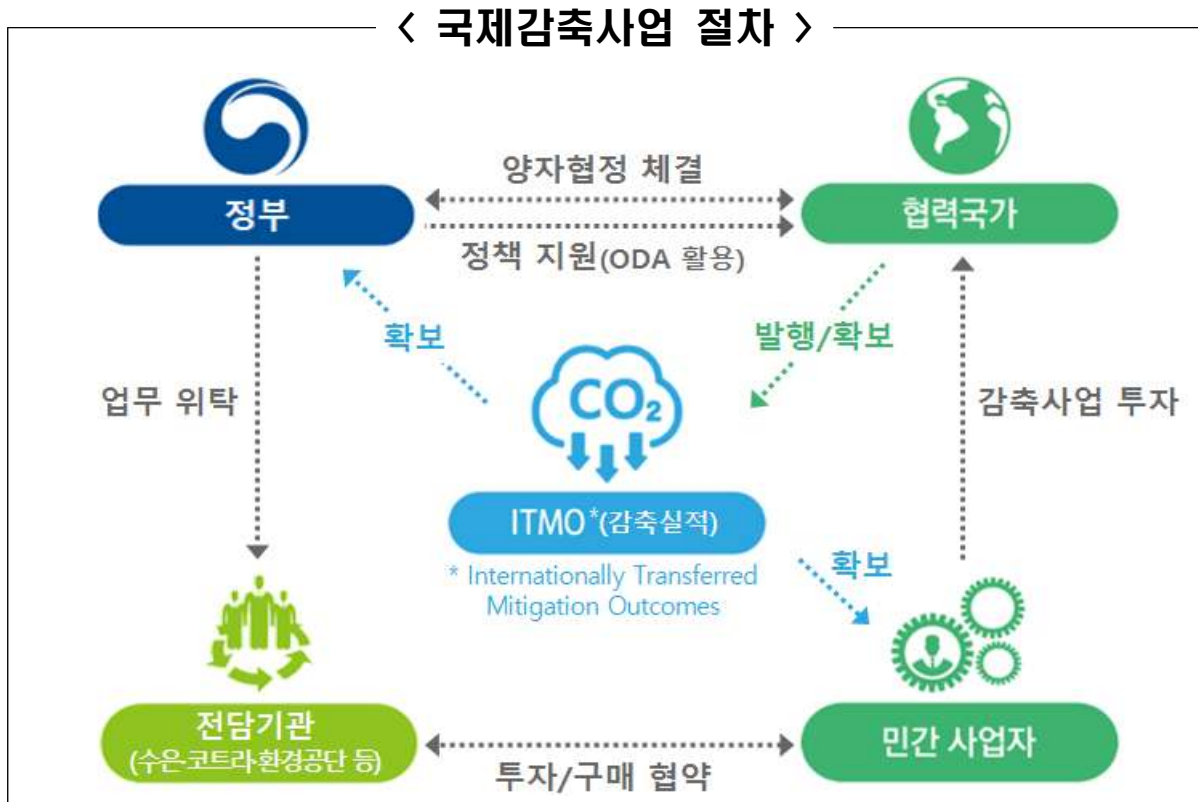
- **【개념】**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
  - 국제감축사업은 이를 위한 투자, 구매, 기술지원 등 사업을 통칭
  - \* (예) 폐기물 자원화, 태양광 보급, E-mobility 교체, 산림흡수원 증진(REDD+) 등
- **【배경】** 파리협정에서 쏘 지구적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\*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(감축실적 거래) 규정
  - \* 탄소 배출의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별로 같으나, 감축비용은 상이한 점에 착안

### ② **【동향】 日·스위스 등은 선제적 준비 중, 우리도 활용 공식화**

- **【국외】** 日·스위스 등은 국제감축을 NDC에 보완적 활용 선언
  - 국제감축 활용 국가들은 파리협정 제6.2조 협력적 접근법\*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,
  - \* UNFCCC 하 중앙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G2G 협정 체결을 통해 사업 수행
  - 일본 등은 이미 다수 국가와 협력관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중
  - \* (예) 일본 : '13년 이래 총 17개국과 파트너십 체결, 194건 시범사업 수행 중
- **【국내】** 우리나라도 국제감축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\*으로 주목, NDC 달성에 보충적 활용 공식화
  - \* 국제감축을 통해 세계 NDC 달성 비용을 '30년경 2,500억불/년 절감 가능하며, 절감비용 재투자시 50억톤/년 추가 감축 가능 (국제배출권거래협회, '19)

### ③ [사업 절차] 양자협정에 기반, 사업 협의·추진 및 실적 이전

\* 파리협정 제6.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기준



#### ① (양자협정 체결) 협력국 정부와 감축량 분배 협상, 감축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\*을 위한 G2G 양자협정 체결

\* 파리협정에서는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지는바, 협력국은 실적 이전분만큼 배출량 상향조정 및 국제 보고·검토의무 이행 필요(이중계산 방지) → 협력국 협조 필수

- 법·제도 정비 등 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병행

#### ② (사업 협의 및 추진) 사업수행자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

#### ③ (실적 이전)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받고, 우리 정부는 지원 금액\*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확보

\* ODA 재원은 개발원조 원칙상 사용 불가, 일반재정 활용 필요

####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지원 유형

- ▶ (투자 지원) 민간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고, 정부는 지분만큼 감축실적 회수
- ▶ (구매 지원) 민간 확보 감축실적을 정부가 협약조건(물량, 단가 등)에 따라 구매



## 〈 국제감축사업 사례 〉

### □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가스 포집·소각 [환경부 시범사업]

- (개요)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(NEDS)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·소각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몽골 대기질 개선

- ▶ 매립장 유형 : 위생매립장
- ▶ 매립장 운영기간 : '09~'23(예정), 약 7백만톤 매립
- ▶ 매립가스 발생량 : 매립 종료 후 약 22.5m<sup>3</sup>/분 발생, 메탄가스 농도는 50% 산정
- ▶ 온실가스 저감 방법 : 매립가스 전량을 포집 및 소각(CH<sub>4</sub>→CO<sub>2</sub>로 전환)



- (경과) 환경공단-울란바토르市 양자협력 기반 사업 기획·착수

- ▶ 환경공단-울란바토르市 '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(NEDS) LFG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업무협약' 체결('20.9.)
- ▶ 사업타당성조사 완료('21.5.) 및 기본설계(~'22.5.)
- ▶ 환경공단-울란바토르市 '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' 체결('21.10.)
- ▶ 한-몽 환경부 파리협정 제6조 감축협력을 위한 사업의향서 교환('21.12.)
- ▶ 시범사업자 지정 및 환경공단-매립지공사 업무협약 체결('21.12.)
- ▶ 한-몽 환경부장관 '파리협정 하 국제감축 이행약정' 체결('22.5.)

- (총사업비) 132.1억원

- (시설비) 84.5억원 (공사비, 현장조사비,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)
- (운영비) 47.6억원 (직접인건비, 관리 및 사무비, 시설운영비)

- (예상 감축량) 10년간 56만톤CO<sub>2eq</sub> (연간 5.6만톤CO<sub>2eq</sub>)



## Ⅱ.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필요성

### ①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 필요

- 우리나라는 지난해 NDC를 상향('21.10.)하면서 '30년 국제감축 목표로 33.5백만톤CO<sub>2eq</sub>\* (전체 감축 목표의 11.5%) 제시
    - \* 민간이 확보하는 국제감축실적 외에 **순전히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몫**
  - 다만, 감축실적 확보의 원천인 국제감축사업이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\* 국내외 실적 확보 경로가 불확실
    - \*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후속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기인
    -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이나 자국 NDC 우선 활용이 전망되며, 우리나라는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
- ⇒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 前에 비용 효과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점하여 추진 시급

### ②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 기회로 활용

- NDC 제출 당사국(194개) 중 122개국 이상이 국제감축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, 향후 유망한 신산업 분야
-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사업 참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선도자 역할 수행 가능

### ③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에 부응하여 양자협력 내실화 추진

- 감축설비 보급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, 상호 간 안정적으로 감축실적 확보 가능
- 또한 국제감축사업을 ODA 등 전후방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기대

### Ⅲ. 그간의 정책노력 및 평가

#### ① [현황] 국제감축사업 추진기반·여건 마련 등 초기 단계

- (국내 추진기반 구축) 탄중위를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 세부 절차를 규율하는 국내 규범\* 마련 중

\* 「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(가침)」(탄중위)

- (G2G 추진여건 조성) 협력국과 감축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베트남과 양자협정 既체결, 향후 확대 계획\*

\* 협력국의 감축 잠재력, 국내 기업의 진출수요, 외교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18개국(베트남 포함)을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('22.5.), 협상 추진 중

- (사업 활성화 유도) 선도사례 창출을 위해 공공 주도 시범사업\* 진행 중이며,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 계획

\* (예)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·소각 사업(환경공단·매립지공사, '22.5.~)

#### ② [평가]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박차 요구

- (국내 추진기반 구축) 규범 마련을 완료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, 중장기 정부 지원계획 수립 필요

- (G2G 추진여건 조성) 협력국 확대를 위해 양자협정 촉진 필요

- 특히 파리협정 하에서는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협력국 협조를 유도하는 동시에, 우호적 사업 환경\*도 조성하는 전략 요구

\* (예)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NDC 관련 법·제도 정비 등

- (사업 활성화 유도) 보다 광범위한 사업 추진 지원과 함께, 기업 애로 해소 및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범부처 노력 필요

## IV.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

### 정책 목표

- ▶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
- ▶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 기회 확대
- ▶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에 부응하여 양자협력 내실화

### 추진 체계

#### ◇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립

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  
플랫폼 內 협업·지식공유로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

### 정책 과제

#### ① 국내 추진기반 구축

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·체계 정비 마무리  
감축경로·사업소요 도출 및 증장기 지원계획 수립  
국제감축사업 투자·구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모델 설계

#### ② G2G 추진여건 조성

양자협정 체결 확대 및 표준 협정문안 마련  
개도국 협력 유도를 위해 양자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  
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병행  
국제금융기구(MDB)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 
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 참여를 통한 양자협력 점진 확대

#### ③ 사업 활성화 유도

사업 발굴·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
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 적극 지원  
대내외 사업 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 
대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

## V. 세부 추진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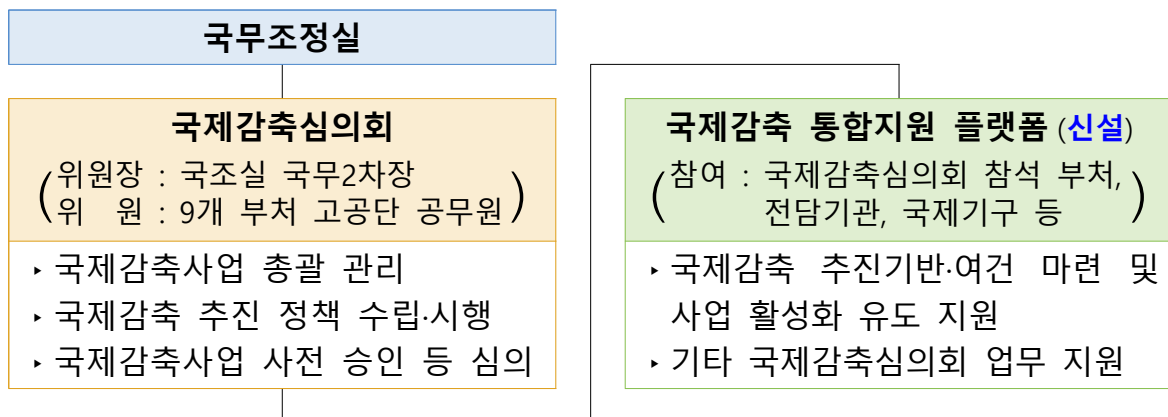
### 추진체계

###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립

#### ①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

- 국제감축심의회(국제감축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·조정) 산하에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('22.9.)
  -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 및 일선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관\*,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 논의·조정
- \* 국제감축사업 수행, 협력국 협의 등 지원을 위해 부처가 지정하는 기관
- 정기적(월 1회)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 확보

< 국제감축 통합지원체계 >



#### ② 플랫폼 內 협업·지식공유로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

- (**협업**) 국제감축사업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\*와 협업하여 디벨로퍼로서 사업 기획 및 자금 조달 역량 강화
- \* (예) GGGI : 스웨덴·노르웨이·독일 등 위탁을 받아 국제감축사업 개발 지원 중
- (**지식공유**) 환경공단 등 시범사업 既추진 기관의 사업관리 경험과 협력국 정보를 전담기관 간 공유하여 PM 역량 배양

## 1 국내 추진기반 구축

- ◇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·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고,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 및 사업소요에 기반하여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

### ①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 · 체계 정비 마무리

-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고시\* 마련을 완료('22.9.)하고 구체적 사업지침\*\* 수립('22.下~)
  - \* 국제감축사업 승인·등록, 국제감축실적 취득·거래·이전 등 절차 규정
  - \*\* (예) 「산업·에너지 부문 국제감축 투자·구매사업 운영요령」(산업부)
- 국제감축등록부\* 등 사업 등록·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
  - \* 국제감축사업 신청·승인,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
- 국제감축사업 참여 희망 기업 대상 '찾아가는 설명회' 실시 등 세부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 전개('22.9.~)

### ② 감축경로 · 사업소요 도출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

- (감축경로·사업소요) 경로방식\*에 근거하여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를 수립\*\*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요 도출('23.上)
  - \* 목표 달성방식 : (경로방식) 점진 감축 및 최종연도 확보 실적을 목표연도에 사용, (평균방식) NDC 이행기간 중 확보한 감축실적의 연평균 값을 목표연도에 사용
  - \*\* 목표 달성방식(경로방식/평균방식 여부) 및 감축경로는 UNFCCC 보고 필요
    - 보고 시한 : (목표 달성방식) 최초 감축실적 이전 前, (감축경로) '24.12.31.
- (지원계획) 중장기 사업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이행력 담보('23.上)

### ③ 국제감축사업 투자·구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모델 설계

- (투자)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부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모델 설계('23.上)
- (구매) 장기구매계약, 경쟁입찰, 선도거래, 옵션 등 다양한 구매 지원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('23.下)

다양한 지원모델 예시

구분	주요 내용
투자 지원	직접비의 30~50% 보조(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)
구매 지원	장기계약 개별 협상을 통해 장기구매계약 체결, 실적 이전시 대금 지급
현물거래	경쟁입찰에 따라 실적 구매(입찰 상한가는 배출권 가격과 연계)

## 2 G2G 추진여건 조성

◇ 우선 협력대상국의 국제감축 협력 유도 및 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을 ODA 등과 연계하여 추진

-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펀드에 EDCF 출자를 검토하고,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

사업 추진 단계별 ODA 연계 예시

단계별 과제		사전 준비 · 양자협정 체결	투자 · 사업 승인·투자	운영 · 실적 확보·이전
↓ (연계)		↓	↓	↓
O D A	정책 지원 <sup>주1</sup>	정책환경 조성 지원 (예 : NDC 법제도 정비)	본사업 연계 지원 (예 : 감축량 산정 지원)	후속 지원 (예 : 인력양성 지원)
	인프라 지원 <sup>주2</sup>	실증 R&D (예 : 본사업 타당성 검증)	본사업 연계 인프라 구축 (예 : 친환경 발전소-도심 간 송배전망 구축)	
	직접투자	국제기구 다자펀드에 EDCF 출자 검토		

주1」 양자 ODA, 국제기구 신탁기금 활용 / 주2」 양자 ODA, EDCF 활용

## 1 양자협정 체결 확대 및 표준 협정문안 마련

- (양자협정 체결 확대)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18개국을 중심으로 양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

### 우선 협력대상국(총 18개국)

구 분	국 가
既체결	베트남('21.5월)
체결 추진 (17개국)	인니, 인도, 칠레, 태국, 몽골, 라오스, 우즈베크, 사우디, 콜롬비아, 페루, 브라질, 필리핀, 방글라데시, 미얀마, 스리랑카, 모로코, UAE

- 대상국의 양자협정 체결 의향을 파악('22.7.)한 후, 협력 의지가 높은 국가부터 전략적으로 협력체계 확대('22.下~) 추진
- 또한, 현지 감축여건 파악 등을 통해 우선 협력대상국 지속 발굴
- (표준 협정문안 마련) 양자협정 추진시 즉각 활용 가능한 협정문 표준안('22.6., 완료) 및 부속문서 표준안('22.下)\* 마련

\* 「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」 정책연구(산업부, ~'22.10.) 활용

### 양자협정 체계

구 분	주요 내용
① 기본협정	포괄적 협력 분야, 국제감축사업 운영을 위한 공동토 설치 등
② 부속문서	공동토 운영규정, 감축실적 검증·분배 세부 절차 등

## 2 개도국 협력 유도를 위해 양자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

- 우선 협력대상국의 협력 유도를 위해 ODA 등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\*하고, 부처별 ODA\*\* 간에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

\* (예) 본사업 : 몽골 울란바토르시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·소각 사업  
ODA :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 } 연계

\*\* 산업부(기후변화협약대응 한-개도국협력), 환경부(그린뉴딜·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), 산림청(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), 기재부(기후변화 관련 KSP) 등

- ODA 사업 간의 연계 협의 추진을 위해 사업 발굴·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정보를 적극 공유



### ③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병행

○ 국제감축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('22.下~)

- 기존 신탁기금\*을 통해 국제감축과 연계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, 기구별 협력 성과 등에 따른 신규재원 출연 추진

\*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, ADB e-Asia·지식협력기금 등

#### 국제감축 관련 국제기구 추진 현황

▶ (개도국 역량 강화) WB, ADB, GGGI 등은 개도국의 탄소중립 정책방향 설정, 국제감축사업 발굴, 감축실적 거래 협상 및 기반 마련 등 역량 강화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WB	감축실적 거래 계약 체결 지원 등을 위한 '혁신적 탄소자산 기금' 운영
ADB	파리협정 제6조 관련 개도국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'6조 기금' 운영
GGGI	인니, 세네갈, 모로코, 베트남 등 주요 개도국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, 감축실적 거래 계약 체결 지원 등 역량 배양사업 진행 중
ASEAN	회원국(베트남·캄보디아·라오스·필리핀·인도네시아 등) 대상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컨설팅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추진 중

▶ (감축실적 확보) ADB는 CDM 체제 하에서 일본과 함께 국제감축사업 운영, 다자펀드 형태의 실적 확보사업 추진 등 경험

구분	주요 내용
ADB	일본 신탁기금(JFJCM)을 통해 국제감축사업 지원('14~)
	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先구매하는 '미래탄소펀드' 운영

### ④ 국제금융기구(MDB)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

○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실적 확보 경로 다변화를 위해 ADB 펀드\*에 EDCF 출자 검토

\*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촉진펀드(CACF) 운영 계획

-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 동원\*

\* (예) 사업 발굴시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(KSP)이 재원을 분담하고 국내 기업이 타당성조사 수행 업체로 참여

## 5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 참여를 통한 양자협력 점점 확대

- WB 기후마켓클럽 등 국제감축 관련 해외 지식교류 협의체에 참여하여 협력국과 네트워킹 강화 및 협력 지평 확대(22.下~)
  - 또한 국제감축 관련 해외 논의동향 파악 및 국가 간 정보 교류\* 기회로 삼아 추후 우선 협력대상국 선정 등에 활용
- \* (예) 他 국가들의 기반구축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투자 최소화

### 기후마켓클럽(WB)

- ▶ (개요) 감축실적 발생·이전·사용 등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정책 공유 및 논의
- ▶ (회원국) 스위스, 스웨덴, 일본, 싱가포르, 부탄, 방글라데시, 가나 등 13개국 / Klik Foundation, GGGI, UNDP 등 5개 기관
- ▶ (운영방식) 월별 회의를 통해 파리협정 제6.2조 관련 세부 내용 토론·논의 및 시범사업 추진 관련 경험·지식 등 실무 정보 공유
- ▶ (가입절차) 사무국(WB)에 가입 의향을 밝히고, 회원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가입국 정부 대표가 LOI(Letter Of Interest)에 서명

## 3 사업 활성화 유도

◇ 보다 광범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단계별로 민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촘촘히 설계

### 사업 단계별 정부 지원 개선방향

단계별 과제		사업 발굴·개발	구조화 / 자금조달	사업절차 이행
		▶ 사업 발굴원 확보 ▶ 타당성조사(F/S)	▶ 사업 구조화 ▶ 투자자금 조달	▶ 대내외 협의·승인 ▶ 실적 확보·이전
↑ (지원)		↑	↑	↑
정부 지원	현행	F/S 비용 지원	투자 등 지원	-
	개선 (추가)	협력모델 설계	공적금융 지원	컨설팅 지원
		신규 방법론 개발	파트너링 지원	MRV 부담 완화
		G2G 사업 발굴		배출권 연계 간소화

※ 대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

## ① 사업 발굴·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

- (협력모델 설계) 정부부처\* - 전담기관 - 기업 간 협력모델\*\*을 설계하고, 이를 통한 사업 발굴·개발 지원('23~)
  - \* 탄중법상 부문별 관장기관(농림·산업·환경·국토·해수부) 및 관계부처(기재부, 산림청 등)
  - \*\* (예)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·소각 사업(환경공단·매립지공사, '22.5.~)
- 특히, 사업 기획 과정에서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가 풍부한 수은·코트라 등 전담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\*
  - \* (예) 수은 : 수출금융 등 既지원 기업의 해외 사업장 환경설비 개선 사업 등
- (신규 방법론 개발) 그린수소, CCUS\* 등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국제감축사업 유망 분야의 방법론 개발\*\*을 선제적 지원('24~)
  - \* 탄소 포집·활용·저장(Carbon Capture, Utilization, Storage) 기술
  - \*\* CDM(교토체제 下 시장 메커니즘)의 그린수소, CCUS 방법론은 1건에 불과
- (G2G 사업 발굴) 양자협정 체결국(예 : 베트남)과 공동위원회 설립 등 협정 이행 과정에서 정부 간 사업 발굴 협의('22.下~)

## ② 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 적극 지원

- (투자 등 지원) 다양한 투자 등 지원모델을 바탕으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감축사업 지원\*('23~)
  - \* ('23~) 시범사업 지원, ('25~) 사업규모 확대 등 본격 사업 지원
- (공적금융 지원) 수은(여신상품 개발)\*, 무보(지원요건 개선)\*\* 등 민간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공적금융 지원 강화('22.下)
  - \* (예) 국제감축사업 전용상품 개발(기업 규모별 최대 100bp 우대금리 지원 등)
  - \*\* (예) '탄소종합보험' 지원요건 완화 및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등
- (파트너링 지원)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현지 정부, 디벨로퍼, EPC, 컨설팅社 등과 매칭 지원('24~)
  - \* 현지 '탄소중립 지원센터' 개설(코트라 해외무역관 내), '넷제로 설명회·상담회' 개최 등

### 3 대내외 사업 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

- (컨설팅 지원) 전담기관이 국가별 유망 분야 조사부터 감축 실적 발급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 컨설팅 지원('23~)
- (MRV\* 부담 완화) 협력국과 양자협정 체결\*\*시 국제감축실적 검인증 주체로서 국내 기관의 참여 근거 마련('22.下~)
  - \* 감축량 측정(Measurement), 보고(Reporting) 결과를 검증기관이 검증(Verification)
  - \*\* 파리협정 제6.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시, 감축실적 측정·보고·검인증(MRV) 주체·절차 등에 관해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추진 가능
- MRV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등에서 감축실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국내 MRV 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
- (배출권 연계 간소화) 국제감축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(K-ETS) 활용 절차 간소화\*('22.下)
  - \* (현행) 국제감축실적 既승인된 경우도 K-ETS의 실적 인증 절차 필요 (1년↑ 소요)  
(개선) 既승인된 국제감축실적은 최소 요건만 확인 후 배출량인증위원회 승인

### 4 대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

-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\*임을 감안,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 유도\*\*('23~)
  - \* ❶국제감축 세부 이행절차 미확립, ❷정부간 협력 전제, ❸사업 운영경험 부족 등
  - \*\* 공공기관 국제감축사업 투자시 예타, 출자·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 등

#### 공공기관 국제감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향

	현 행		개 선
신 청	연 3회 (1월/5월/9월)	→	수 시
수 행	4개월 이내	→	2개월 이내

※ 사업 추진으로 획득하는 ITMO를 예타시 공공성·수익성 평가에 반영 병행

- 대형사업을 발굴·기획·추진하여 선도사례를 창출하는 한편, 국내 기업도 사업 과정에 일부 참여하여 사업 경험을 축적

## VI. 과제별 추진 일정

과 제	일정	담당
<b>[ 추진체계 ]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립</b>		
<b>1.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</b>		
①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	'22.9.	탄중위
② 플랫폼 內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	계속	부처 합동
<b>[ 정책과제 ] 추진기반·여건 마련 및 사업 활성화 유도</b>		
<b>1. 국내 추진기반 구축</b>		
①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·체계 정비 마무리 - 국제감축사업 세부 절차 관련 고시 마련 완료 - 구체적 사업지침 수립 - 국제감축등록부 등 시스템 구축 추진 - 기업 대상 다각적인 홍보 노력 전개	'22.9. '22.下~ 계속 '22.9.~	탄중위 산업부 등 환경부 탄중위/부처 합동
② 감축경로·사업소요 도출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- 감축경로 수립 및 사업소요 도출 - 중장기 정부 지원계획 수립	'23.上 '23.上	탄중위/부처 합동 탄중위/부처 합동
③ 다양한 국제감축사업 지원모델 설계	'23	기재부/산업부
<b>2. G2G 추진여건 조성</b>		
① 양자협정 체결 확대 및 표준 협정문안 마련 - 우선 협력대상국 중심으로 양자협정 체결 가속화 - 협정문 및 부속문서 표준안 마련	'22.下~ '22.下	외교부/탄중위 외교부/산업부/탄중위
② 개도국 협력 유도를 위해 ODA 등 협력사업 연계	계속	국조실/외교부/기재부
③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병행	'22.下~	기재부 등
④ 국제금융기구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 지원	계속	기재부
⑤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 참여	'22.下~	기재부 등
<b>3. 사업 활성화 유도</b>		
① 사업 발굴·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- 민관 협력모델 설계 - 유망 분야 신규 방법론 개발 - 양자협정 체결국과 협정 이행 및 사업 발굴 협의	'23~ '24~ '22.下~	부처 합동 부처 합동 외교부
② 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 적극 지원 - 국제감축사업 투자 등 지원 - 공적금융 지원 강화 - 현지 사업주체와의 파트너링 지원	'23~ '22.下 '24~	부처 합동 기재부/산업부 산업부
③ 대내외 사업 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- 사업 쏠 과정 컨설팅 지원 - 국내 기관의 국제감축실적 검증 참여 근거 마련 - 국제감축실적의 배출권 연계 간소화	'23~ '22.下~ '22.下	부처 합동 외교부/탄중위 환경부
④ 대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	'23~	기재부